



연합노보



2015
특보
3.25 수

www.newsunion.co.kr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지부 (110-140) 서울 종로구 을곡로2길 25 / 전화 398-3620~2 / 팩스 398-3630 / 발행인 오정훈 · 편집인 이을·김태균

“편집권 독립 · 공정보도 지키기 총력 투쟁”

신임 경영진, ‘불통’ · ‘편집총국장제 무력화 시도’

연합뉴스 노동조합은 앞으로 편집권 독립과 공정보도를 지켜나가기 위한 총력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신임 경영진이 취임도 하기 전에 편집권 독립의 상징인 편집총국장제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반적 경영계획에 관한 청사진을 보여달라는 노조의 공개질의서에도 신임 경영진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연합뉴스는 25일 사옥에서 주주총회를 열고 박노황 후보를 사장으로 최종선임한다. 연합뉴스의 최대주주인 뉴스통신진흥회는 지난 10일 박 후보를 연합뉴스 사장 최종후보로 선임한 바 있다. 이날 주주총회에서는 또 국제업무 상무이사에 심수화 부산본부 기획위원이, 기획총무 상무이사에 이흥기 콘텐츠평가실 고문, 콘텐츠 상무이사에 조복래 연합뉴스TV 보도국장

이 각각 선임된다.

신임 경영진은 이날 오후 취임식을 열고, 26일 오전 첫 출근을 할 예정이다.

노조는 신임 경영진 취임에 앞서 지난 18일 대의원 대회를 열고 주주총회와 취임식, 첫 출근시 편집권 독립과 공정보도를 지키라고 요구하는 선전전을 열기로 결의했다.

이는 신임 경영진이 콘텐츠 상무제 부활을 통해 편집총국장제 무력화를 시도할 것으로 우려되는데다, 1989년 이후 26년째 시행되고 있는 편집총국장 임면동의제마저 없애려 하는 정황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박 사장 후보는 대의원대회 직전 노조와 만나 “노조가 편집총국장 인사에 3분의 2 이상 참여해서 절반이 안 됐다고 떨어뜨리는 임면동의 제도는 인사 · 경영권

침해”라면서 “이는 불법적인 요소를 갖고 있어 단체협약을 빨리 고치고 인사를 해야 할 급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편집총국장 임면동의 제도는 1989년 26년간 노사 합의하에 운영돼온 제도다.

박 사장 후보는 앞서 연합뉴스 사장공모 지원시 뉴스통신진흥회에 제출한 직무수행계획서에서 콘텐츠 상무제 도입계획을 밝힌 바 있다.

노조는 이날 선전전에 이어 신임 경영진이 향후 단체협약에 규정된 편집총국장제를 무력화하려고 시도하는 경우 법적 책임을 묻는 절차에 돌입하는 한편, 조합원들의 충의를 모아 총력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편집총국장 임면동의 투표 불이행은 불법행위

노동조합은 신임 경영진이 추진하려는 정황이 확인된 임면동의 투표 불이행이 현실화하면 이를 불법행위로 보고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 단체협약에 규정된 편집권 독립을 위한 대표적 제도로는 편집총국장 제도가 있다. 편집총국장은 기자 모두가 공유하는 편집권을 대표하는 편집인으로, 임면동의를 거쳐 기자직 사원 3분의 2 이상이 참여해 유효투표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임명될 수 있다.

편집총국장 제도는 지난 2012년 103일간의 파업 끝에 노사합의로 도입한 제도로 편집과 경영의 분리를 통해 불공정 편파보도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구성원 의지의 표현이다.

편집총국장에 대한 임면동의 제도는 1989년부터 단체협약에 규정된 편집국장 임면과 관련한 기자들의 의견수렴 제도에 기원하는 제도로 그 역사가 26년에 이른다.

기자직 사원 3분의 2 이상이 참여해 유효투표 과반수의 찬성으로 통과되는 편집 · 경제 · 지방 · 국제뉴스국 등 제작국장 임면동의 투표제도가 도입된 것은 1999년으로 역시 16년이나 됐다.

만약 사측이 편집총국장에 대한 임면동의를 거치지 않고 편법을 쓰는 경우, 이는 노사 모두 구속하는 단체협약 위반으로 노조를 무시하는 행위다.

단체협약 부칙에는 단체협약 불이행 때문에 발생하는 책임은 불이행한 측에 있다고 돼 있다. 아울러 노사관계법은 단체협약 불이행을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불이행의 책임자를 상대로 각종 법적 조치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단체협약에는 또 공정보도 실현이 조합원의 근로조건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보도와 관련한 부당한 압력을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공정보도에 관한 연구 및 조사활동을 하는 공정보도위원회의 설치와 관련한 내용도 들어가 있다.

노사는 이와 함께 2009년 뉴스통신진흥법이 개정되면서 노사협의회를 통해 편집규약을 제정, 이에 따른 편집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매달 한 차례 열리는 편집위는 편집권의 독립과 공정보도를 위한 사내기구로, 편집총국장측을 대표하는 편집위원과 노조측을 대표하는 편집위원으로 구성된다.

편집위에서는 편집과정에서 독립성 · 공정성 · 공익성 훼손, 내부 구성원에 의한 자율성 침해 관련 사안을 논의한다. ■

불공정보도 지시? 이럴 땐 이렇게 하세요.

연합뉴스 편집규약에는 편집권은 편집총국장이 대표하되 뉴스 제작에 참여하는 모든 기자가 공유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뉴스제작에 참여하는 모든 기자는 자신이 공유하는 편집권이 외부의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으로부터 독립돼 있는지 끊임없이 되새겨봐야 합니다.

아울러 외부의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에 의해 편집과정에서 보도의 공정성이 훼손되는 경우 맞서서 싸우되 제대로 안 되면 사후적으로라도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기구를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조는 매달 한 차례 연합뉴스 전달 송고분 기사 전체에 대해 공정보도위원회를 열어 작성이나 편집과정에서 공정성이 훼손당한 사례를 찾아내 토론합니다.

이어 매달 초 열리는 편집위원회에서는 공보위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해 편집총국장과 제작국장들에게 문제제기를 하고 그 답변을 공개합니다.

편집과정에서 보도의 공정성이 훼손된 사례는 공보위 간사나 노조 사무처장 ☎(02)398-3622, 각 공보위원에게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본인과 직접 관련된 내용 외에 보고 들은 사례도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노조는 실시간으로 사실 관계를 조사해 당사자와 상의한 뒤 필요한 대응을 합니다.

노조 홈페이지에서 익명을 보장받고 보도의 공정성 훼손 사례를 논할 수도 있습니다. 공정보도 자유발언대(<http://www.newsunion.co.kr/Freespeaking/Fair/List.aspx>)가 바로 그 용도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공정보도에 대한 감시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조합원 한 명의 용기가 연합뉴스의 공정보도 쟁취에 중요한 동력이 됩니다. 보도의 공정성이 훼손된 사례에 대해서는 언제든 서슴없이 말씀해주시요. 노조는 항상 기다리겠습니다.



누가 연합뉴스의 파국을 원하는가?

주주총회의 추인절차도 거치지 않은 신임 경영진의 기세가 대단하다. 조직 개편이다 인사개편이다 하며 갖가지 추측들이 난무하고 있다.

103일간 파업의 결과물로 노사가 난항 끝에 합의한 편집총국장 제도를 무력화하겠다는 서슬 퍼런 소식도 들려온다.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연합뉴스에 '공정정보도'는 결코 훼손해서는 안 될 가치임에도 이를 지켜나갈 최소한의 장치에 칼날을 들이댄다면 노사관계뿐만 아니라 회사 전체가 파국의 소용돌이로 빠

져들 수 있다. 담당 업무가 무엇인지 아직도 확실치 않은 콘텐츠상무직제의 신설은 편집·경영 분리 원칙에 따라 만들어진 편집총국장 제도를 훼손하려는 시도가 아닌지 의혹을 떨쳐버릴 수 없다.

또한, 대내외적 공격과 있지도 않은 경영권 침해를 구실삼아 수십 년간 투쟁으로 지켜낸 편집총국장·제작국장 임명동의 제도마저 일거에 없애야 한다는 주장은 언어도단일 뿐이다.

이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의 의견을 담아 답변을 요구한 공개질

의서에 박노황 사장 후보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노동조합은 신임 경영진이 지난 파업의 상처를 치유하고 구성원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연합뉴스의 미래와 공공성, 공정성을 담보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거나 한지 다시 묻고 싶다.

불공정보도와 인사 전횡으로 촉발된 파업의 과거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연합뉴스 구성원들은 뉴미디어 시대를 헤쳐나갈 비전과 연합뉴스의 공격기능 강화를 차기 경영진의 도전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신임 경영진은 취임 후 첫 단추를 단체협약이 규정한 편집총국장 제도에 대한 도발로 꿰어서는 안 된다.

구성원들의 염원과 의지를 외면한 채 신임 경영진이 독단의 길로 나선다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노사화합과 연합뉴스의 미래발전이냐 다시 회복 못 할 파국이라는 갈림길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답은 명확하다. ■

연합뉴스 편집권 독립 투쟁의 역사

연합뉴스 편집권 독립 투쟁의 역사는 한국 언론의 편집권 독립 투쟁의 역사와 맥을 함께 한다. 1987년 민주화 투쟁 직후부터 한국 언론은 언론노조 운동을 벌이기 시작했다. 언론노조의 목표는 언론인들의 근로조건 향상과 공정정보였다. 각 언론사 노조는 처음부터 단체협약에 편집권 독립 관련 규정을 넣고자 애썼다. 가장 먼저 편집권 독립 규정을 둔 것은 1988년 6월 25일 한국일보 단체협약이었다. 또 부산일보 노조가 단체협약 과정에서 편집국장 복수 추천제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7월 11일 파업을 벌여 결국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언론의 본래적 사명을 다하기 위한 의지의 표현으로, 편집국장은 편집국 노조원이 추천하는 3인 중에서 임명한다"는 노사협약을 이뤄냈다.

연합통신은 8월 22일 단체협약에서 "편집·보도는 공정해야 하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독립한다"는 규정을 마련했다. 이어 이듬해 편집국장 추천제 등을 놓고 노사협상이 결렬되자 10월 13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편집권 독립을 위한 89년 파업

협상 진행 당시 이선근 조합원이 노보에 쓴 글을 보면 상황을 잘 알 수 있다. "우리 조합도 (...) 올해에는 편집국장 추천제 등 편집권 독립과 공정정보도 관련 조항을 구체화하는 단체협약안을 마련, 지난달 28일부터 회사측과 단체협상을 들어갔다. 그러나 회사 측이 의외로 완강한 거부로 일관하는 바람에 협상이 좀처럼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합은 이 같은 회사 측의 입장이 최근의 공안정국에 편승, 현 체제를 그대로 끌고 가려는 중역들의 기회주의에서 나온 것으로 보고 조합의 총역량을 결집, 당초의 목적을 관철시킬 방침이다."(연합노보 제32호, 89.8.19.)

그러나 결국 회사 측과의 협상은 결렬됐고 이에 노조는 9월 23일 비상대의원대회를 열고 쟁의를 결의했다. 당시 쟁의특보에 기록된 쟁의대책위원회 위원 명단에는 박정찬을 비롯해 박노황, 이흥기, 심수화, 이병로 등 이름이 눈에 띈다. 89년 투쟁은 피켓을 들고 사내를 순례하기도 하고 차장단 동참을 촉구하는 규찰대

를 조직하기도 했으며 파업 비참가 조합원 명단을 특별보통을 통해 공개하기도 하는 등 치열하게 진행됐다. 심지어 김태웅 당시 노조 위원장은 단식 투쟁도 불사했다. 사옥에 '편집권 독립으로 거듭나는 연합'이라는 현수막을 걸었다가 회사 측이 무단 철거한 사건도 있었다. 사진자료 등을 보면 박노황 당시 쟁대위원은 사내의 피케팅이나 선전전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보이며, 파업기간 조합에 성금을 냈다는 기록도 남아 있다. 결국 박노황 쟁대위원은 파업 이듬해 쟁의부장 직을 맡게 된다.

"회사 생존 위해 제작국장 직선제 필요"

편집국 독립과 제작국장 임명 방식에 대한 논의는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이뤄졌다. 7기 집행부 당시 발간한 연합노보 제72호(94.6.30.)는 '회사의 생존을 위해 제작국장 직선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세웠다. 7기 집행부는 "고객사들이 연합통신의 기사로는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는데 별 도움이 안된다고 판단할 때 우리는 영원히 설 땅을 잃게 될 것"이라며 "공정정보도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갖추지 못하고 무조건 강자의 논리를 좇아 춤을 춘다면 우리가 제공한 서비스가 자본과 인력, 지원체제에서 우리보다 훨씬 우위에 있는 고객사를 만족시킬 수 없음은 자명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최근 원칙없는 인력충원과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기사들의 사기가 바닥을 맴돌고 있고, 이로 인해 기사의 경쟁력마저 의문시되고 있는 마당에 권력의 눈치보기에 급급한다면 과연 연합통신 기사가 상품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 하고 의문을 표시했다. 공정정보도가 연합뉴스의 미래를 위한 '최선의 방책'이라는 내용으로 요약될 수 있다. 오늘날 읽어봐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훌륭한 글이다. 7기 집행부는 이흥기 위원장과 오재석-심수화 부위원장 체제였으며, 노보 편집인은 신삼호 교육부장이었다. 박노황 현 사장 후보도 당시 노조 운영위원으로 있었다.

편집총국장제와 편집규약, 편집권 독립의 두 축

연합뉴스 편집권 독립 투쟁의 백미는 2012년 공정

정보를 위해 벌였던 103일간의 파업이었다. 파업은 박정찬 사장 당시 불공정보도 때문에 촉발된 것이었기 때문에 파업의 마무리는 공정정보도와 편집권 독립이어야 했다. 노조 파업 투쟁은 결과적으로 편집총국장 제도를 쟁취해냈다. 2013년 단체협약에 규정된 편집총국장 제도의 핵심은 편집총국장을 편집의 총 책임자인 '편집인'으로 한다는 것과, 중간 평가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이는 2009년 연합뉴스 노사가 정한 연합뉴스 편집규약 2조의 "편집권은 편집인이 대표하되 뉴스제작에 참여하는 모든 기자들이 공유한다"는 규정과 함께 1988년부터 30년 가까이 지속해온 연합뉴스 편집권 독립 투쟁의 맥을 그대로 잇는 것이다.

또한 이 규정이 있음으로 해서 연합뉴스는 내적 언론자유(Innere Pressefreiheit)를 규정한 독일 쾰트도 이체자이팅, 기자들이 사장을 선출해온 프랑스 르몽드, 편집국장을 직선제로 뽑는 영국 가디언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언론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편집권 독립이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대에나 필요한 것이라는 궤변도 들린다. 하지만 권위주의 정권이 모습을 감춘 1997년 관훈클럽이 펴낸 '한국 언론 2000년 위원회 전문위원 최종보고서'도 "실제 신문기사의 분석을 통하여 소유 및 경영이 편집을 압도하고 있는 현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각 신문사의 소유주 내지 경영진 또는 그들의 관련 기업 및 사람들의 긴밀한 관계에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자신들과 이해관계에 따라 보도를 일방적으로 확대하거나 축소하고 있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가까이는 2012년 연합뉴스의 파업도 편집권 독립이 여전히 우리에게 소중한 가치라는 방증이다. 편집권 독립은 과거에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소중한 가치인 것이다.

참고문헌: 박홍원(2011), 「편집권 독립과 언론의 자유」; 연합통신노동조합, 『연합노보』;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2000), 『언론노력 10년사』; 최연구(2003), 『르 몽드』; 한국언론재단(2002) 엮음, 『편집권 독립, 반세기의 고민』; "Guardian appoints Katharine Viner as editor-in-chief", The Guardian, March 20, 2015. ■